

중동 순방 마친 文, ‘수소경제·미래산업 협력’ 등 결실

한-UAE 기업인들 만나 수소 협력 공동프로젝트, 금융 지원 등 협의 분야별 14건 수출 등 주요문건 체결

문재인 대통령이 중동 3개국(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순방을 통해 ‘수소경제·미래산업·공급망’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 미래 먹거리인 탄소중립 전략 핵심 과제로 수소경제가 떠올랐고, 중요 물자 공급망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만큼 문 대통령이 경제외교 성과에 집중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공식 실무방문을 시작으로 6박 8일 간 정상 외교길에 올랐다. 첫 방문지인 UAE에서 문 대통령은 수소경제 및 관련 공급망 협력을 위해 노력했다. 순방 첫 일정으로 문 대통령은 16일(이하 현지 시간) 양국 주요 정부 인사, 수소 산업 관련 기관 및 기업인 등이 참여한 ‘한-UAE 수소협력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참석했다. 라운드테이블에서 한국·UAE 기업들은 수소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산업 전 주기에 걸친 협력을 강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중동 3개국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9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킹칼리드 국제공항 왕실터미널에서 이집트로 이동하기 위해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화하기로 했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공동 프로젝트 추진, 금융 지원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협의했다. 이와 관련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에티하드 신용보험공사가 수소 산업 프로젝트 관련 금융지원 협력 확대 MOU를 체결했다.

문 대통령 UAE 순방 계기에 방상 분야 성과도 있었다. ‘한국형 패트리엇’으

로 불리는 탄도탄 요격미사일 체계 ‘천궁-II’(M-SAM2·중거리 지대공미사일) UAE 수출이 확정된 것. 단일 무기체계 계약으로 최대인 35억 달러(약 4조 1000억원) 규모다.

사우디아라비아 공식방문 일정에서도 문 대통령은 ‘수소경제’ 협력 성과를 위해 노력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 야마마 궁에서 모하메

드 왕세자와 회담을 갖고 인프라(에너지, 건설 플랜트), 수소에너지, 원전·방산, 지식재산, 정밀의료 등 미래 유망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담에서 양 정상은 수소경제 관련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 대통령은 알-루마얀 사우디 국부펀드(PIF) 총재이자 아랍코 회장 겸 접견한 가운데 ‘사우디 국부펀드, 아랍코가 한국 기업과 협력을 지속 확대해 줄 것’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한-사우디 스마트 혁신성장 포럼’에서는 ▲제조 ▲인프라 ▲디지털 ▲보건 의료 ▲건설 협력 ▲에너지 등 분야별 14건의 수출·합작법인·파트너십·협력등 주요문건도 체결했다.

사우디 순방 기간에는 한국 정부와 걸프협력회의(GCC)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합의도 이뤄졌다.

중동 순방 마지막 일정인 이집트에서 문 대통령은 20일 압델 파타 알 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는다.

회담 이후 양국은 ▲한-이집트 무역

경제 파트너십 공동연구 MOU ▲KICA 이집트 간 전자조달시스템 개선사업 교환각서 등 협정을 체결한다. 문 대통령 순방 계기에 아프리카 대륙 최초로 이집트와 FTA 공동연구 개시도 합의한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이 참석할 ‘한-이집트 미래 그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미래차·IT·바이오 등 미래산업의 협력, 신재생 수자원 등 친환경 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한 양국의 무역 투자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는 무역투자, 무역보험 등 협력 MOU(양해각서)와 전기차 개발 협력 LOI(양해서) 등 한-이집트 기관 간 협력약정 체결도 이뤄진다.

정상 방문 계기에 문 대통령은 향후 5년간(2022~2026) 이집트 EDCF 차관 한도 10억불 신규 설정을 공약할 예정이다. 룩소르-하이담 철도 현대화 사업 차관 계약도 체결해 이집트 지속가능발전 지원에서 미래협력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이재명 “문화강국 열 것... 예산 2.5% 확대”

문화예술 6대 공약... 노동권 보장 기본소득 연간 100만원 등 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문화예산 2.5% 확대 및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지급 등을 담은 문화예술 공약과 함께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의 디지털 콘텐츠 대전환으로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20일 서울 인사동 코트에서 문화예술인과의 만남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상 속 문화예술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문화예산 2.5% 확대 및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연간 100만원 ▲국민 문화기본권 보장, 국민장작 플랫폼 운영 ▲지역 문화자치 강화 ▲청년 문화예술인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 ▲문화외교 강화로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 ▲문화콘텐츠 세계 2강 등 문화예술 6대 공약을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인사동 코트에서 문화예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 후보는 국가 재정에서 문화예산 비중을 현재 보다 두 배 이상인 2.5%까지 대폭 확대하고, 문화예술인 연간 100만원 기본소득 지급과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를 비롯해 프리랜서, 계약직을 포함한 모든 문화예술인에게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강화 등을 약속했다.

또, 과도한 성과주의를 앞세운 탁상·

관료주의를 배격해 문화예술인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정책에 반영하며 지역 예술인 및 지역별 장애인지원센터의 기능과 지원을 확대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폭도 넓힐 계획 등과 함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로 아직까지 고통받고 계신 문화예술인의 피해치유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국민 문화기본권 보장을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생애주기별로 확대해 원하는 국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1인 1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국 기초단위 지방정부에 ‘작은 미술관’과 ‘작은 영화관’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장작 플랫폼’ 운영과 관련해서는 국민 누구나 자신이 생산한 문화콘텐츠를 보존하고 활용해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국민의 창작 활동 활성화를 위한 국민지식재산권 적극 보호 등을 제시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연말정산 더 돌려주겠다”

윤석열, ‘생활공약 3종’으로 표심 공략

반려동물·양육지원 등 발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내게 힘이 되는 세 가지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공약(연말정산·반려동물·양육지원)을 발표하면서, 봉급생활자·반려인·예비 부모의 표심을 공략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000만 봉급생활자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말정산 방식을 개편하고 반려동물이 아플 때, 부담 없이 치료받고 오래도록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정부가 먼저 봉급생활자의 소득세 부담을 연 3조원 이상 줄여 투명하게 세금 내는 시민에게 13월의 보너스(연말정산)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정부가 2009년 봉급생활자에 대한 인적공제 본인 기본공제액(1인당 150만원)을 정한 뒤 12년간 한번도 올리지 않은 탓에 인적공제에 대한 혜택이 너무 박하다는 불만을 갖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연말정산 인적 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으로 ▲인적 공제 본인 기본공제액 상향 조정(1인당 150만원→200만원) ▲부양가족 요건 강화(만 20세 이하→만 25세 이하) ▲부양가족 인적 공제 배제기준 상향 조정(현행 연소득 100만원 이하→2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700만원 이하)를 제시했다.

윤 후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카드 사용액(신용·직불)의 소득공제 한도 50% 인상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음식·숙박비, 유류비, 교통비 지출액의 공제율을 지금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연말정산·반려동물·양육지원 생활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체사진

2배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반려인으로 알려진 윤 후보는 반려동물 표준수가제를 도입해 반려동물 치료비를 낮추고 반려동물 산업을 지원 및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동물복지공단을 설립해 개와 고양이 같은 주요 반려동물의 ‘다(多)빈도 고(高)부담’ 질환에 대해 진료 항목 표준화·항목별 비용 공시제·진료비 사전공시제를 정착하고 표준수가제를 도입한다.

또한, 떠오르는 펫 산업 육성을 위해 용품·미용·카페·호텔·훈련·장례 등 서비스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추모시설(장례식장·추모공원·장묘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반려동물 보호시설과 수준을 확충해 유기동물을 최소화하고 반려동물 보호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후보는 위생 상태나 동물 복지 기준을 위반한 상업적 ‘강아지 공장’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시설·위생 기준 등을 강화하고 면허제를 도입한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정의당, 양자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선거의 공정성 훼손, 중단 돼야”

정의당이 20일 대선 후보 양자 TV토론 일정을 조율 중인 방송3사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양자 TV토론을 협상하며 방송3사와 함께 TV토론 일정을 조율 중이었고, 이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반발에 나선 것이다.

배진교 원내대표와 강은미 의원은 이

날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앞서 오전에는 이은주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를 방문해 공정선거를 훼손하는 불공정 양자토론에 대한 항의와 선거 관리 책임이 있는 선관위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동영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 논평을 통해 “방송의 정치적 독립 훼손, 국민의 알 권리 침해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양자토론 방송은 중단돼야 마땅하

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본인들 의혹에 대한 사법적 검증대인 특검도 회피한 마당에 국민의 검증대인 TV토론마저 담합했다”며 “공공재인 전파를 독점하겠다는 행태는 명백한 오만이고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 권리와 참정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불공정 ‘양자토론’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두 후보가 당당하다면 다자토론에 못 나올 이유가 없다. 링 밖에서 말싸움은 그만하고 링에 올라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 진검승부를 하자”고 촉구했다. /박정익 기자